

# 연세대 앞에 대각선 횡단보도 오늘 개통...30곳 설치 목표

### 2023년까지 총 240개로 확대...올 상반기 17곳 목표

#### 종로구청 입구·이태원역 은평롯데몰 앞 연내 설치

서울 신촌 연세대 앞에 '대각선 횡단보도'가 설치됐다. 서울시는 이를 비롯해 올해 대각선 횡단보도를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 30곳 이상에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대각선 횡단보도는 별도의 보행전용 신호를 통해 보행자가 교차로 내 율하는 방향으로 한 번에 건너갈 수 있다. 전 차로 차량이 동시에 완전 정지해 안전사고가 예방된다.

시 관계자는 "차량에게는 다소 불편하지만 보행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보행친화적 교통시설"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간선도로에도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추진해 보행자 중심 도시교통체계를 구축한다는 목

표를 세웠다. 2018년 120개 수준이던 대각선 횡단보도를 오는 2023년까지 240개로 5년 내 2배 이상 확대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시는 그동안 대각선 횡단보도를 좁은 도로 위주로 설치했지만, 올해부터는 간선도로, 쇼핑이나 관광 수요가 많은 지점, 어린이·어르신 보호구역, 녹색교통진흥지역 등에 설치해 보행자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첫 사업으로 연세대 정문 앞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완료하고 6일 오전 개통했다. 이 밖에도 종로구청 입구, 이태원역 앞, 은평롯데몰 앞 등도 연내 개통할 계획이다.

신호교차로 5700개소를 전수조사해 최대 33개소를 대상으로 선정할 시는 관련기관과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 올해 횡단보도 관련 예산으로 예년의 2배 수준인 50억 8800만원을 투입한다.

33개소 중 이날 개통된 연세대 정문 앞을 포함해 17개소에 대한 실시설계가 완료됐고 상반기 중 설치를 완료한다. 나머지 16개소는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 진척 상황을 살펴 최소 30곳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하겠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상반기 설치대상은 4월 중 예산 배정을 완료해 5~6월까지 공사를 추진한다. 하반기 설치대상은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 8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10월까지 설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2021년 사업 후보지를 선정해 기초설계를 진행 중"이라며 "보행자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기존에 설치된 총 120개 대각선 횡단보도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경계석 턱이 높은 곳 등 시민 불편이 있는 횡단보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대각선 횡단보도는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사업"이라며 "유동인구가 많고 보행유발이 많은 지점에 우선적으로 확대 설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 군산시 공공배달앱 '배달의명수' 인기...지자체 문의 쇄도

#### 강임준 군산시장, 소상공인 위해 '배달의명수' 상표사용 승낙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사진 가운데)이 지난달 13일 출시한 공공배달앱 '배달의명수'를 홍보하고 있다

전북 군산시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출시한 공공 음식배달앱 '배달의명수'가 전국에서 이름을 알리고 있다.

가입비와 광고료를 없앤 공공배달앱 '배달의명수'는 최근 민간 배달앱의 수수료 인상을 놓고 소상공인들이 반발하면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이제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이때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라로 내몰고 있다"며 "공정한 시장경쟁질서를 어지럽히는 독점과 힘의 횡포를 억제하는 것은 의무로, 경기도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했

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 지사는 공공앱 개발에 나설 것을 대비해 강임준 군산시장과 통화해 '배달의명수' 상표 공동사용을 동의받았다.

군산시도 '배달의명수' 상표를 전국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공공배달앱 '배달의명수'에 대한 출시 소식이 알려지면서 경기도 광주를 비롯해 부산남구 등 전국의 지자체 100여 곳에서 벤치마킹을 위한 문의와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배달의 명수가 거대한 민간 배달 앱과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초반 질주'를 하는 것은 무엇보다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소상공인은 민간 배달앱과 달리 이용 수수료와 광고료를 한 푼도 낼 필요가 없다. 군산시는 이를 통해 업소당 월 평균 2만원 이상 아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소비자들도 민간의 배달앱에서는 받아주지 않는 군산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음식값을 10% 할인받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

실제 지난달 13일 출시된 '배달의명수'는 지난 5일까지 20여일 동안 처리한 주문은 모두 6937건으로 매출액만 1억6600여만원에 이른다.

배달앱 가입자 수도 첫날인 지난 3월 13일 5138명에서 출발해 지난 5일 현재 2만3549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시는 최근 민간 배달앱이 사실상의 수수료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반발을 사고 있어 '배달의명수' 시장 점유율이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임준 시장은 "가맹점 입점 신청과 소비자의 가입이 꾸준히 늘고 있어 시장에도 지각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배달의명수를 전국 어느 지자체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아픔을 함께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전국에서 연계된 서비스를 함께할 수 있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전국 모든 소상공인들이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유나 기자

## '관내 식당 영수증 제시하면 동 주민센터서 마스크 줍니다'

#### 코로나19 확산에 지역경제 살리는 '착한 소비운동 전개중'

행정안전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각 자치단체가 착한 소비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착한 입대인 운동에 이은 착한 소비 운동은 골목식당가나 농·어가,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한 착한 선 결제, 승차 구매, 공유주차장 할인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 중이다.

서울 양천구는 직원들이 지역 내 단골집을 방문해 미리 결제(3만원 이상) 한 후 이를 SNS에 인증하고 다음 참가자를 지명한 후에 다시 찾는 소비촉진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관내 음식점 등에서 10만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을 동 주민센

터에 가지고 가면 손소독제나 마스크를 지급하는 행사도 진행 중이다.

부산 수영구에는 밤 먹고 마스크 받고 운동을 진행 중이다. 관내 식당 영수증을 제시하면 동 주민센터에서 마스크를 나눠주는 행사다.

각 지자체의 승차구매도 눈길을 끈다. 경남 김해시와 충남 서산시, 각각 대성동고분박물관이나 중앙호수공원 주차장에서 '승차 구매' 방식으로 대파·상추·아유 등 꾸러미(11종,2종)를 판매 중이다.

경북 포항시는 구룡포해수욕장 주차장에서 승차 구매를 통해 활어회 준비물량 전량을 판매했으며 지역 농산물도 함께 판매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공영주차장 주차료 일부를 감면하거나 무료로 개방하는 자치단체도 늘고 있다.

경기 수원시는 오는 5월 31일까지 공영 유료주차장 43개소 무료로 개방하고 점심시간에 단속을 유예하는 도로변 주차차 허용 시간도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로 늘렸다.

강원도 춘천시는 오는 30일까지 공영주차장 10개소(총1901면)의 주차료를 50% 감면(1시간 600원→300원)해 주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왕벚꽃축제, 유채꽃축제, 4·3희생추념식 전야제 등 총 22건 행사를 취소하고 해당 예산 약 35억원 전액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재편성해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 '세(稅)꾸라지' 천태만상...외제차 트렁크서 금반지 와르르



제납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세(稅)꾸라지' 상속채납자의 재산은니 꼼수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지만 경기도 광역채납업 앞에서는 번번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상속채납자에 대한 징수사태를 통해 경기도 광역채납업의 활약상을 살펴봤다.

지난 해 4월 경기도 광역채납업이 채납액 징수를 위해 가평군에 사는 상속채납자 A씨의 자택을 방문했다.

하지만 별다른 압류물건이 없어 발길을 돌리려는 순간 때마침 A씨 집 앞에 주차된 외제차 한 대가 눈에 띄었고, 운전대 앞을 보니 A씨 아내의 명함이 놓여 있었다.

광역채납업은 이에 연락을 통해 A씨 부부와 연락이 닿았고 개문을 요청했다.

그러나 A씨 부부는 차 열쇠가 없다며 개문을 거부했고, 1시간 정도 승강이 끝에 결국 문을 열었다. 채납팀이 차량을 수색하던 중 트렁크에서 보자기가 발견됐고, 보자기 안에서는 금반지, 금팔찌 등 각종 귀금속이 쏟아져 나왔다.

A씨가 가택수색을 예상하고, 트렁크에 숨겨 놓았던 것이다. 광역채납업은 이들의 보석을 압류했고 공매를 통해 9년간 밀려있던 A씨의 채납액 2800만원을 징수했다.

위장 근저당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다.

경기도 양주시에 사는 상속채납자 B씨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12건에 대한 지방세 1100만 원을 체납했다.

그러나 "땀집 한푼 없다"며 버티던 B씨는 지인 C씨에게 2015년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토지 구입 자금 2억1000만원을 빌려주는 명분으로 해당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납부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채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지인에게는 돈을 빌려줬던 것이다.

이렇게 제3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고액 채납자들이 종종 이용하는 재산은니 수법이다.

일반적인 부동산의 경우 징수기관에서 압류 후에 공매를 진행할 수 있지만, 제3자의 부동산은 이같은 압류 처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근저당권은 압류가 가능해 C씨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될 때 채납자인 B씨에게 배분되는 배당금 중 채납세금을 우선 징수할 수 있다.

채납자의 은행 대여금과 강제개봉을 통해 징수한 사례도 있었다.

대여금과 환 화폐, 유가증권, 귀금속 등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빌려 쓰는 고객전용 소형금고이다.

김윤호 기자

## 세종지역화폐 '여민전' 판매액 한달 만에 84억 달성

#### 세종시 성인 10명중 1명 넘게 발급받아

세종시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여민전의 판매액이 발행 한 달 만에 79억 원을 달성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여민전 카드 발급자는 3만1800명으로 세종시 전체성인 인구 25만 6592명(3월 기준)의 12.4%에 달한다. 이 기간 세종시민 성인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여민전 카드를 발급받은 셈이다.

여민전이 큰 인기를 끌면서 세종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6월까지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전체 판매액도 시민 판매액 79



억원에 정책발행분 5억5000만원을 더해 총 84억5000만 원에 이른다. 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제 침체 문제를 시급히 해소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시민에게 300억 원 어치를 판매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민전 카드 사용자